

KIRI 세미나

# 초위험 사회의 포용보험과 보험산업의 역할

이재연(보험연구원 연구위원)

2026. 7. 23.

# 목 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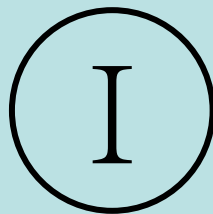
---

I. 포용보험의 필요성

II. 포용보험과 보험산업의 역할

III. 보험업계의 실천과 포용보험 정책 현황

IV. 지속가능성을 위한 과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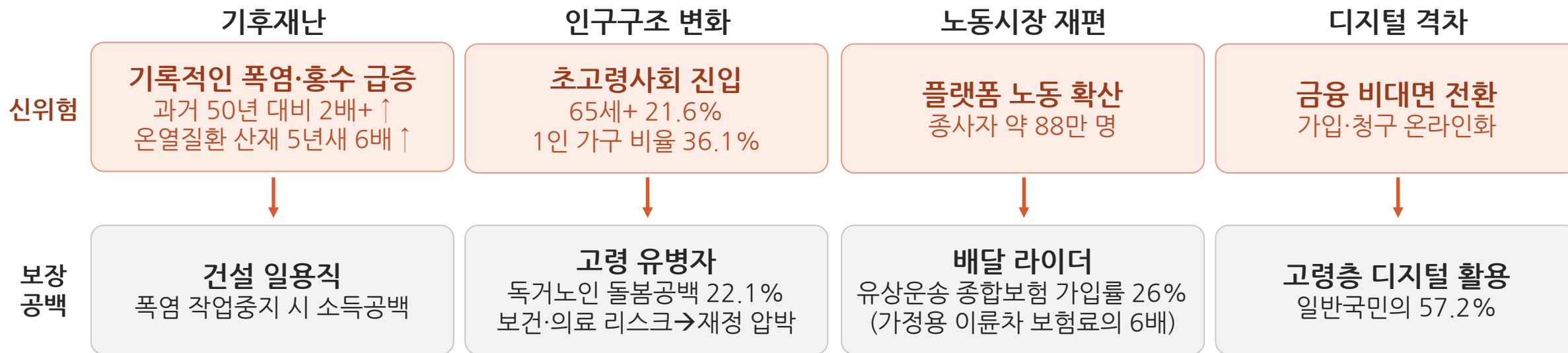
# 포용보험의 필요성

---

1. 초위험 사회로의 전환
2. 초위험과 전통 보험원리의 한계
3. 취약계층과 보장공백

# 1. 초위험 사회로의 전환

- 오늘날 사회는 이질적 위험이 동시다발적으로 상호작용하는 **다중위기(Polycrisis) 초위험 사회**로 진입함
  - 과거에 없던 **새로운 위험**이 등장하고, **위험의 구조** 자체가 **바뀜**
  - 윌리엄 벡의 '위험사회'가 더 다양하고 거대한 초위험 사회로 심화됨



자료: 고용노동부 보도자료(2026. 7. 2.; 2024. 8. 5.), 국가데이터처 「장래연구추계」(2026),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과 (2024), 금융감독원 보도자료(2025. 12. 15.), 과학기술정보통신부·NIA, 『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』(2025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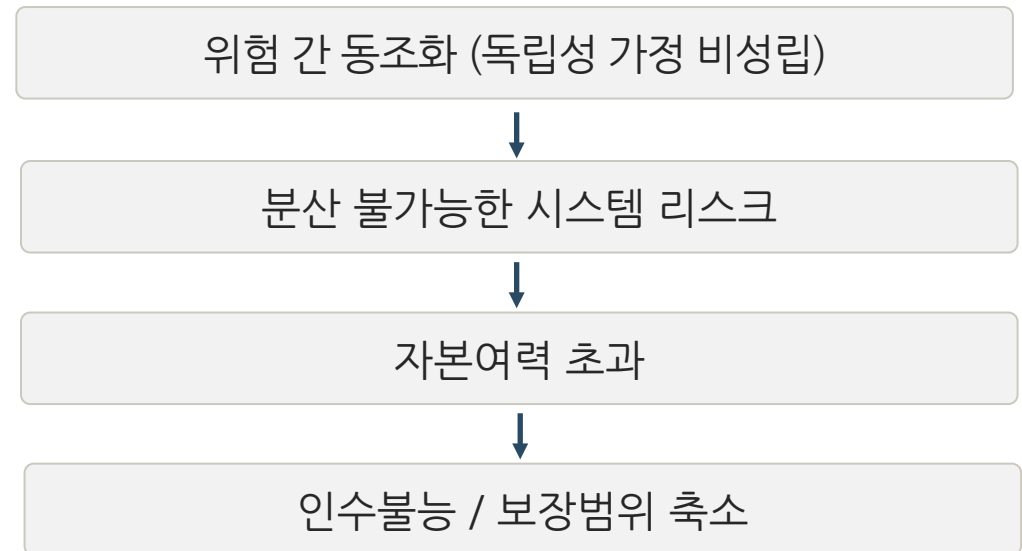
## 2. 초위험과 전통 보험원리의 한계

- 신위험·바뀐 위험구조는 전통적 보험의 전제인 **예측·분산·독립성**을 무너뜨려, 개별 **민간이 홀로 인수하기 어려운 공백**을 만듦
  - 시장 스스로 채울 수 없는 영역으로 남음

### 초위험의 특성

- **예측의 한계** (손해 이력이 없는 신종 위험)
  - 기후재난·디지털 위험은 과거 데이터가 없어, 계산 가능한 리스크가 아닌 불확실성
- **분산의 한계** (거대하고 동시다발적인 위험)
  - 피해 규모가 크고 동시다발적이어서 손해를 넓게 분산하기 어려움
- **독립성의 한계** (위험의 역진성)
  - 위험이 서로 독립적이지 않아 동조화되며, 대비 여력이 없는 계층에 편중됨

### 초위험 대입 시 전통 보험원리



### 3. 취약계층과 보장공백

· 위험의 변화는 사회 전체가 함께 겪지만, 그 손실은 **대비·회복 여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에 집중됨**

- 위험 노출은 큰 반면(위험한 노동·주거), 이를 감당할 소득·자산은 부족해 한 번의 충격이 오래 남음
- 보험이라는 대비 수단마저 공급·수요 양측의 제약으로 충분히 작동하지 못함

#### 공급측 장벽

· **인수 (위험의 선별 및 배제)**

- 사고 위험이 높거나 손해 데이터가 없는 경우 요율 산정이 어려워, 언더라이팅 단계에서 가입이 거절되기 쉬움

· **상품 구조 (경직된 요율)**

- 소득이 불안정하고 유동성이 낮은 계층을 위한 유연한 상품의 공급이 부족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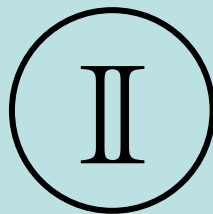
#### 수요측 장벽

· **지불 여력**

- 소득이 불안정하고 낮은 지불여력을 지닌 계층은 보험료를 감당하기 어려움

· **보험 문해력 (청구·재가입 장벽)**

- 청구 절차가 복잡해, 정보에 취약한 계층일수록 보상받지 못하고 포기함
- 연속 보장·재가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낮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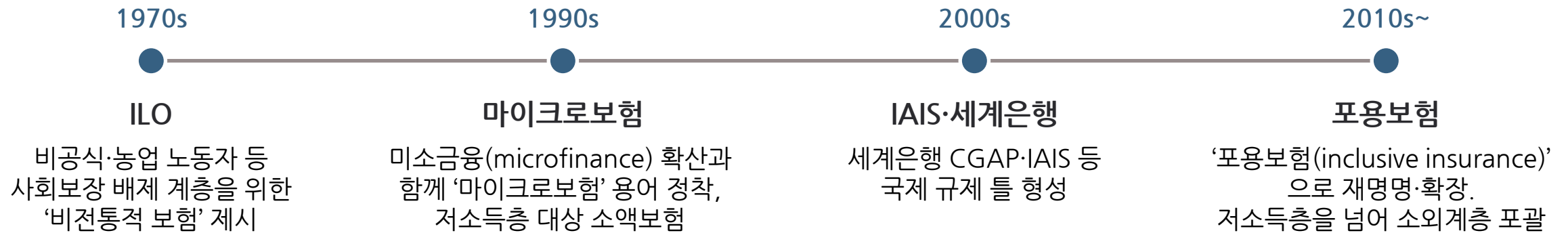
# 포용보험과 보험산업의 역할

---

1. 포용보험이란
2. 포용보험, 왜 보험산업의 과제인가

# 1. 포용보험이란

## · 포용보험 개념의 전개: 마이크로보험에서 출발해 보험 소외계층 전반으로



## · 포용보험이란, **보험 소외계층**이 필요한 **보장에 접근**할 수 있도록 **지원**하는 보험

- 대상: 시장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저소득층·고령층·영세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
- 위험: 취약계층이 시장에서 배제된 전통적 위험 + 기후·인구구조·노동 등 새로 부각된 신위험
- 공급 주체: 정부가 환경을 조성하고 민간이 공급을 주도하는 협력 구조
- 핵심 요소: 접근성(accessibility)·이용가능성(availability)·부담가능성(affordability)·위험인식(awareness)을 갖춘

## 2. 포용보험, 왜 보험산업의 과제인가

- 포용보험은 **위험공동체를 유지·확대**하는 일이며, 이는 사회의 안전망을 구축함과 동시에 **보험산업의 지속가능성**으로 이어짐

### 공적 재정의 한계

- 새롭게 확대되는 위험과 사각지대에 재정·제도가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움
- 정부 대응은 사후 보전에 그쳐, 위험이 커질수록 지속하기 어려움

### 보험산업의 본질적 기능

- 위험을 사전에 분산하는 것은 보험의 본질 기능이며, 포용보험은 그 확장선에 있음
- 위험 평가·인수·분산 역량은 보험산업의 강점임



###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전략

- 취약계층을 위한 보장을 넓힘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높임
- 위험공동체를 유지·확대할수록 보험산업은 사회 내 역할과 기반이 넓어짐



# 보험업계의 실천과 포용보험 정책 현황

---

1. 취약계층을 위한 보험업계의 실천
2. 정부의 최근 포용보험 정책 현황



# 1. 취약계층을 위한 보험업계의 실천: ① 협회 차원의 활동

· 생·손보 업계는 **협회 공동기금**을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공헌을 지속해옴

## ■ 생명보험협회 사회공헌위원회 · 2007년~

- **자살예방·생명존중** SOS생명의전화, 청소년자살예방, 마음건강지원
- **시니어·의료** 세대통합 일자리, 힐링센터, 희귀질환센터
- **교육·장학** 금융보험 교육, 학술연구 지원, 대학원·박사장학사업
- **취약계층 지원** 고립·은둔청년, 입양대기아동, 다문화가정 지원
- **공익확산** 노후준비 교육, 국민건강증진, 보험범죄 캠페인
- **기후·환경** 생물다양성 보존, 기후위기 교육

## ■ 손해보험협회 사회공헌협의회 · 2011년~

- **재해대응** 침수방지(예방)·희망하우스(복구)·풍수해·지진재해보험(제도)
- **저출생 극복** 난자동결 시술비,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지원
- **생활안전** 고령운전자 안전장치, 소방·경찰 유자녀 지원
- **기후 취약계층** 냉난방기 지원
- **금융교육** 1사1교 금융교육
- **기타** 긴급 재난구호기금, 동물등록제 활성화

# 1. 취약계층을 위한 보험업계의 실천: ② 개별 보험회사의 상품 · 활동

## · 개별사는 이전부터 접근성 개선과 사회공헌으로 취약계층에 대응해 옴

- 기존 상품의 가입 문턱을 낮추는 상품과 제도 · 심사 개선을 통해 접근성을 향상시킴
- 임직원 봉사·교육멘토링·캠페인·직접 지원 등 사회공헌형 활동을 병행함

### 접근성 개선 상품

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장애인 가입 | 전용상품 출시 → 차별금지 제도로 전환<br>사전고지 의무 폐지·심사 반영 금지로 가입 차별 완화<br>가입 시 차별경험 45.4% (2014) → 13.9% (2023) |
| 고령·유병자 | 노후실손 가입연령 90세로 확대<br>(보장 연령 100세→110세로 확대)<br>유병자 보험 인수심사 체계 개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시간제 보험 | 시간제 이륜차 보험 도입(2019)<br>가입대상 확대 및 할인등급 승계(2026 예정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미니보험   | 소액단기보험으로 생활밀착형 보장 확산<br>(DIY형, 교통재해, 감염병, 상해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# 사회공헌 활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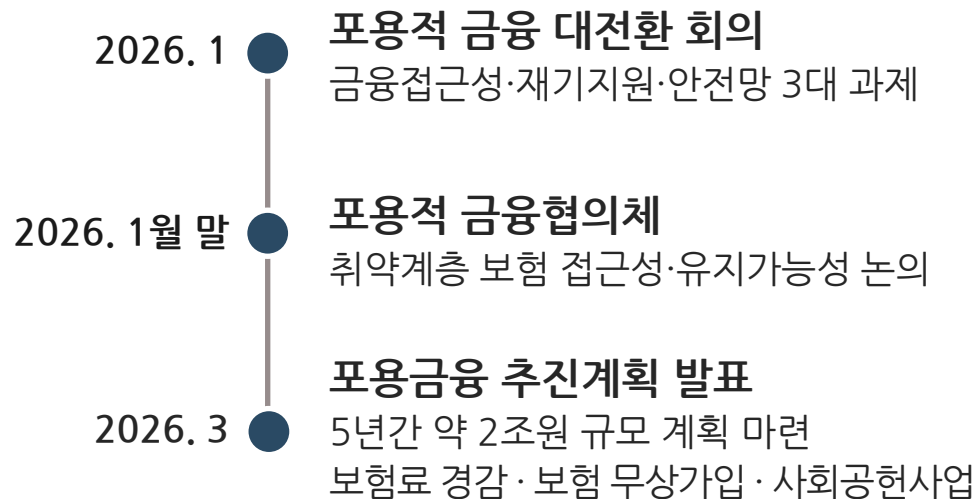
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참여형 봉사   | 연탄·무료급식·반찬나눔·집짓기·헌혈·바자회 기부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교육·멘토링   | 청소년 금융교육·다문화 한글교육·장학금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인식개선 캠페인 | 자살예방·교통안전·보이스피싱 예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취약계층     | 보호아동·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<br>이른둥이·백혈병·소아암 환아 치료비<br>독거 어르신·미혼모 가정 지원 |

## 2. 정부의 최근 포용보험 정책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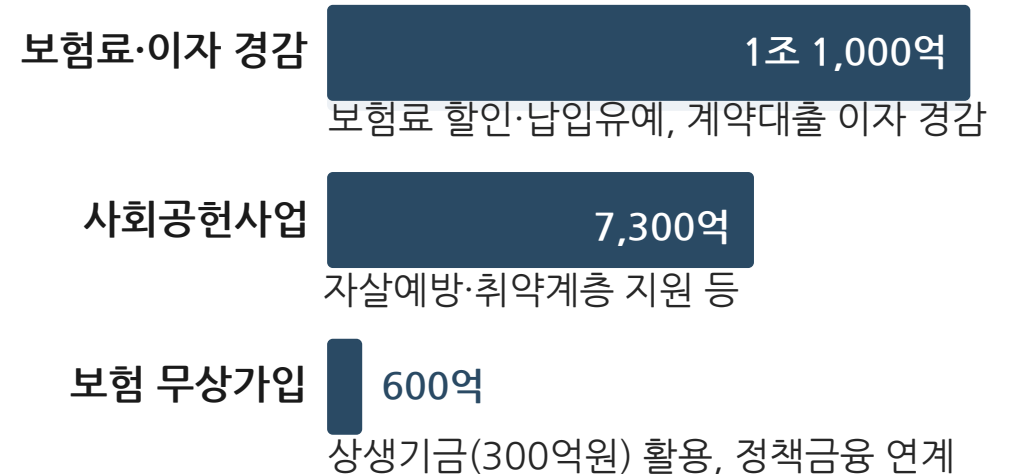
### · 포용보험은 포용금융 정책의 한 축으로 다뤄져 왔고, 최근 그 지원이 확대되고 있음

- 2008년 미소금융중앙재단(현 서민금융진흥원) 소액보험 지원시작
-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금융포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출범 및 ‘금융포용을 위한 9대 원칙’ 채택
- 2017년 G20 금융포용 액션플랜(FIAP)을 개정·채택하고, 2018년 국내 포용금융이 정책 논의 본격화
- 2025년~ 상생기금 조성 등 준비를 거쳐 보험업권 포용금융 추진 계획 구체화 및 지원 확대

#### 최근 주요 포용금융·보험 정책 흐름



#### 보험업권 포용금융 추진계획 (2026)



## 2. 정부의 최근 포용보험 정책 현황: 상생보험 · 보험료 경감

- 포용보험은 정부와 보험업권의 협력으로 추진됨
  - 재원은 보험업권이 부담하고 정부는 정책금융 연계와 지자체 매칭으로 뒷받침함
- 구체적으로는 **무상가입**을 지원하는 **상생보험**과 **보험료 경감** 방식이 있음
  - 상생보험은 2025년 8월 생·손보 업계가 각 150억씩 300억원의 상생기금을 조성해 마련하고, 전국 공모로 선정된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대상과 상품을 선택하도록 함
  - 보험료 경감은 운전경력 인정 할인·이륜차 시간제 보험·납입 유예 등으로 이루어짐

### 상생보험 (소상공인 지원 5종 + 저출산 극복 1종)

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신용보험     | 소상공인 사망·장해 시 대출금 상환      |
| 상해보험     | 5인 미만 소상공인·중소기업 단체 상해    |
| 기후보험     | 폭염·호우로 인한 소상공인·일용직 소득 보전 |
| 풍수해보험    | 태풍·홍수로 인한 상가 파손·침수 피해    |
| 화재보험     | 전통시장·골목상권 화재 피해액 보상      |
| 다자녀 안심보험 | 다태아·다자녀 상해·중증질환 보장       |

### 보험료 경감

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운전경력 인정제도  | 운전경력 등 반영해 자동차 보험료 할인            |
| 이륜차 시간제 보험 | 배달종사자 운행시간만큼 보험료 산정              |
| 대리운전자 보험   | 사고경력자 할증 체계 개선을 통한 적정 보험료로 가입 가능 |
| 납입유예·중지제도  | 경제적 어려움 시 보험료 납입유예·중지에도 가입유지 지원  |
| 저출산        | 출산·육아휴직 시 어린이 보험 할인              |

## IV

# 지속가능성을 위한 과제

-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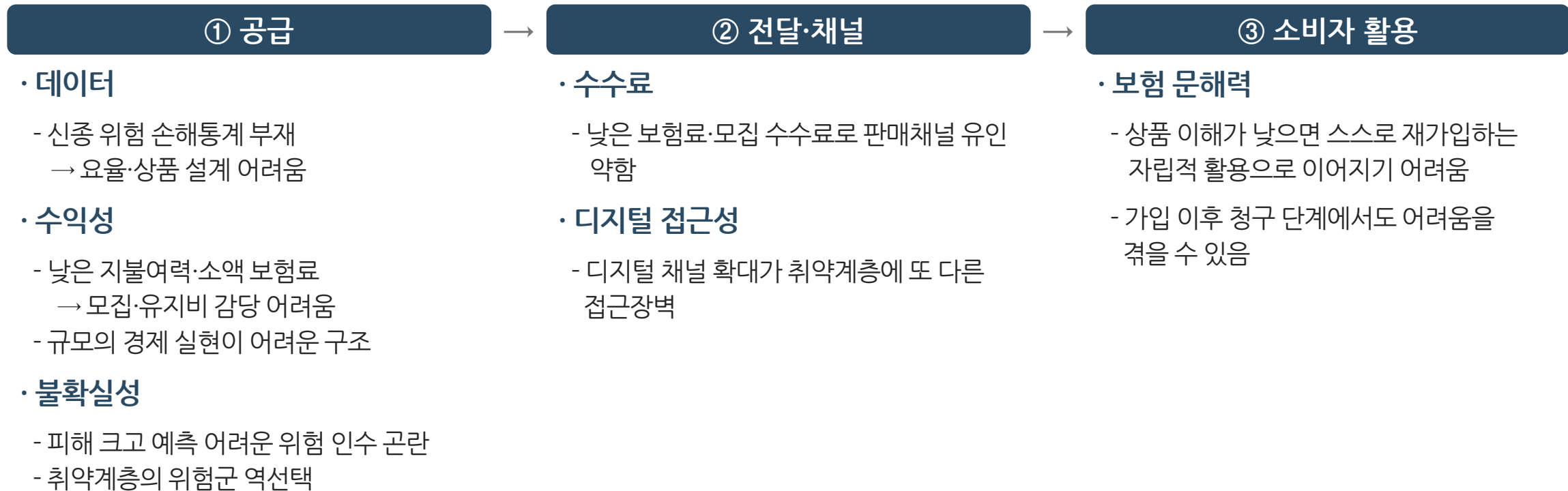
1. 현행 접근의 한계
2. 시장 자생을 위한 유인·여건의 부재
3. 향후 방향

# 1. 현행 접근의 한계

- 협회와 개별 보험회사의 **사회공헌**은 본업인 보험과 분리된 **봉사·기부형** 활동에 가까움
  - 본업의 상품 개발이나 인수 역량으로 전환되지 않아 일회성에 그치고, 지속적 보장으로 이어지기 어려움
  - 손익과 무관한 비용으로 집행되어 경영 여건에 따라 규모가 좌우됨
- 상품형 노력도 이어졌으나, **보장범위가 좁고 소액·단기 중심**임
  - 미니보험·지수형 보험 등은 소액·단기에 집중되어, 기후·재난이나 고령 돌봄 같은 고위험·장기 영역은 상품화가 더딤
  - 유병자·장애인 상품은 가입 문턱은 낮아졌으나 실질 보장이 제한 되는 경우가 많음
- 정부 정책도 무상가입 · 보험료 경감 등 재원을 **직접 투입**하는 방식에 집중되어 있음
  - 가입자의 부담은 덜어주지만, 공급자의 상품 개발·위험 인수 역량으로 전환되지 않음
  - 재원 투입 중심이라, 지원이 멈추면 보장도 함께 멈출 수 있음
  - 상생보험도 공동기금 기반의 무상지원이라는 점에서 같은 한계(직접 지원)를 지님

## 2. 시장 자생을 위한 유인·여건의 부재

- 직접 지원 중심의 접근으로는 공급 → 전달 → 활용 **각 단계의 장벽**이 그대로 남아, **스스로 유지되는 시장 생태계**로 이어지기 어려움



### 3. 향후 방향

---

- 포용보험이 지속되려면 지원에 기대지 않는 **자생적 시장생태계**로 나아가야 함
  - 현재는 공동기금·보험료 지원·무상가입 등 직접 재정지원 중심이라, 지원이 종료되면 보장도 종료되는 구조임
  - 데이터, 위험 분담, 수익성, 전달체계를 갖춘 자생적 시장이 필요함
- 초위험 사회의 위험은 한 주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포용보험은 **민관협력 모델**로 작동해야 함
  - 정부는 제도와 인프라를, 보험회사는 위험관리와 상품·서비스를, 지역사회와 다양한 서비스 제공기관은 현장 전달을 맡는 협력체계가 필요함
  - 포용보험은 공공과 민간을 대체가 아니라 연결하는 장치임
- **한국형 포용보험의 과제**는 위험공동체 유지를 통해 **사회적 가치**와 산업의 **지속가능성을 선순환**시키는 것임
  - 위험공동체를 지킬수록 사회의 안전망이 넓어지고, 산업이 설 자리도 넓어짐

**감사합니다.**

---

# References

---

- 고용노동부 보도자료(2024. 8. 5.), “플랫폼종사자 88.3만명으로 전년 대비 11.1% 증가”
- 고용노동부 보도자료(2026. 7. 2.), “폭염에 취약한 노동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폭염 상황에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.”
- 국가데이터처, 「장래인구추계」, 2072, 2026.07.13, 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(1세별, 5세별) / 전국
- 국가데이터처(인구총조사과), 2024, 2026.07.13, 1인가구비율(시도/시/군/구)
- 국회예산정책처(2026), “포용적 금융 등 금융개혁 방안 III 『은행·보험 부문의 포용적 금융서비스 접근성 강화 방안』”
- 금융감독원 보도자료(2025. 12. 15.), “이륜자보험 요율체계 합리화 '를 통해 배달라이더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.”
- 금융위원회 보도자료(2025. 1. 9.), “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시작합니다.”
- 금융위원회 보도자료(2025. 1. 29.), “보험료 부담 등으로 보험 가입이 힘들었던 저소득층, 저신용자도 꼭 필요한 보험 가입을 확대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.”
- 금융위원회 보도자료(2025. 3. 16.), “질병·사고·날씨 등 생활위험 보장보험에 무상으로 가입하는 「상생보험 사업」을 보험업권이 6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진합니다.”
- 김규동(2026), 「포용적 보험 추진 현황과 제언」, 보험연구원 KIRI Focus
-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(2026), “2025 연차보고서 생명에 사랑을 더하다”

---

# References

---

- 손해보험협회 (2026), “2025 손해보험 사회공헌 활동사례집”
- 이은영·강윤지(2024), 「국내 발달장애인 현황과 민영보험의 역할」, 보험연구원 연구보고서
- McLennan, M. (2023). “The global risks report 2023 18th edition”. In *World Economic Forum Cologny*.
- Swiss Re Institute(2024), “Natural catastrophes in 2023: a looming norm?”, sigma research, No. 1/2024